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대전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용규

전화 042-470-4041 / 팩스 042-470-4240

보도자료

2021. 12. 20.(월)

제 목 2022년 양대 선거 대비 선거범죄 대응체계 강화

- 오늘(12. 20.) 대전지방검찰청은 2022년에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(3. 9.) 및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(6. 1.)에 대비하여, 관내 선거관리위원회·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선거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함
- 대전지방검찰청은 선관위,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3대 중점 단속 대상 범죄(① 금품수수, ②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, ③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개입) 등 선거범죄에 신속·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
- 또한 대전지방검찰청은 ‘선거사범 전담수사반’을 편성하고 집중적인 선거사범 수사 활동을 함으로써 공명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임

1 유관기관 대책회의 등 협력체계 구축

- 2021. 12. 17.(금) 선관위(충남, 대전, 세종)와 1차 대책회의를 개최한 이후, 2021. 12. 20.(월) 관내 선관위, 경찰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범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
- 유관기관(총 19개 기관)
 - 선관위 : 대전광역시, 충청남도 등 각 선관위 및 대전 관내 5개구, 충남 금산군 등 각 선관위
 - 경 찰 : 대전지방경찰청, 충남지방경찰청, 대전 관내 6개 경찰서, 세종 관내 2개 경찰서, 금산경찰서

2

주요 논의 내용

● 『중점 단속대상 범죄』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

- 금품수수,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,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 등 '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'에 대해 각 기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엄정 대응

중점 단속대상 범죄

- **금품수수** : ▲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, ▲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, ▲후보 단일화 관련된 금품 제공·요구, ▲투표율 제고를 위한 유권자들에 대한 기부행위 등
- **여론조작** : ▲유튜브·인터넷 등을 통한 근거 없는 악의적 의혹제기, ▲SNS 등을 활용한 허위사실유포, ▲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
- **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** : ▲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경선·선거 개입, ▲불법사조직 및 유사기관 설치, ▲선거자유방해 수사 등

※ 특히,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대면접촉 선거운동 대신 온라인·비대면 선거운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파급력이 광범위한 허위사실유포 등 사이버 공간의 여론조작 등에 신속·엄정 대응 예정

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

- 선거구별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, 해당 검사가 관할 선관위,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협조체제 구축, 수사개시, 입건 단계부터 실시간 정보공유 등 협력
- 중요·긴급 사안은 선관위 고발 이전이라도 검찰에 정보와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주요 증거 신속 확보

● 적법절차 철저히 준수

- 수사 전 과정에서 제보자 보호, 피의사실 유출 차단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,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적법절차 준수

3

향후 계획

- 대전지방검찰청은 대통령선거일 D-90인 2021. 12. 9. 선거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였고, 지방선거 공소시효 완성일(2022. 12. 1.)까지 비상근무체제 유지 예정임
- 검찰, 선거관리위원회, 경찰은 수사대상자의 소속 정당·신분, 지위 고하,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'법과 원칙'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여, 공명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 ☑

선거사범 신고센터

- ▶ 검찰 : 국번없이 1301, 야간 (042) 470-4290
- ▶ 선거관리위원회 : 국번없이 1390, 인터넷 <http://www.nec.go.kr> (국민참여소통)
- ▶ 경찰 : 국번없이 112, 인터넷 <http://www.police.go.kr> (국민신문고민원)